

2020년 11월 반부패·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퀴즈 정답 및 해설

Q 1 (○ / ×)

- (설문조사) 내가 제안한 적극행정이 상위 결재 과정에 막힌 적이 있다.

(해설) 본 문항에 대한 해설은 <적극행정 올림> 게시판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Q 2 (○ / ×)

- (설문조사) 우리 부서(과)에서는 적극행정을 위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있다.

(해설) 본 문항에 대한 해설은 <적극행정 올림> 게시판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Q 3 (○)

- 부서장이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자가에서 휴식 중이던 부서원에게 “술을 마셨는데 태우러 오라”고 하여 부서장의 차를 대리운전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수차례 지시한 행위는 ‘갑질’에 해당한다.

(해설) 갑질 유형 중 [사적 이익 요구] 유형에 해당합니다. 사안에서 해당 부서장은 ‘근신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공분야 갑질 사례집』, 2020. 8월)

Q 4 (○)

- 외국 출장 중 수수 금지 선물의 배달 사실을 알았으나 출장기간이 상당한 시간 소요되어 곧바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는 선물 수수를 인지한 시점에 하고 반환은 출장 복귀 후 지체없이 하면 된다.

(해설) 공직자가 수수 금지 선물을 받은 경우 신고와 함께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을 하여야 하는데, 선물이 전달된 시점과 공직자가 안 시점에 차이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반환하면 됩니다.

Q 5 (○)

- 수수 금지 선물을 반환할 때, 반환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수수 금지 선물 반환 시, 제공자에게 객관적 전달방법인 택배, 퀵서비스, 우편 등을 통해 반환하고 영수증 등 반환 증명 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소속기관장에게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6 (×)

- 공무원이 경조사의 통지를 하면서 직위를 명시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해설) 공무원이 경조사를 알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신의 직위를 명시하는 것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공무원 행동강령(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7 (×)

- 공무원이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축의금 봉투에 소속 기관 및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해설)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또는 경조봉투에 기관명이나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회상규 상으로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공무원 행동강령(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8 (×)

- 공무원이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게재하면서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알리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해설) 물품의 판매 등 홍보 목적이 아닌 한,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기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밝히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9 (○)

-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하게 될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와 별도로 출장 또는 연가 등 ‘복무상황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출장을 할 수 있는지(「공무원 복무규정」)는 별개 사안입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의 신고’ 여부를 떠나서 근무시간 중에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출장 또는 연가 등 ‘복무상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10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여서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외부강의등 사례금이 상한액(1시간의 경우 40만원, 1시간 초과인 경우 최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다.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여서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이와는 별도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적용되며, 초과사례금을 수수하고 이를 신고·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